

퇴직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빛이다

교육의창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춘래불사춘.

봄꽃 만발한 검은토끼해의 3월에 혼란과 답답함으로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난세다. 코로나 종식되고 찬란한 봄이어야 할 우리네 삶은 난데없는 매국 굴욕외교로 국론이 분열되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진실이 묻히고, 정의가 사라졌다. 이 난망한 시국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일본과 일본전범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피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의 강제 병합이 불법적이고, 그 기간 동안의 강제 동원 역시 불법행위이므로, 강제동원의 주체인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배상요구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내세우면서 사법부의 압류 절차를 중지시켰다. 대통령 윤석열이 한일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명분을 들어 내어

놓은 '해법'은 불법행위의 주체인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서 국내기업에게 배상을 떠 넘기는 것이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일본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마땅한 배상뿐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다시는 침략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방문해서 그동안 양국의 갈등을 한국정부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굴욕적인 행동을 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이 열어가려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는 단지 굴욕적인 것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자주적 외교를 통해 국가와 국토를 보위하고 평화를 유지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 모두가 취했던 외교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친미, 친일을 내세우며, 반중 반러외교를 표방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 결과 대중국 수출이 격감하면서 1년째 무역적자를 통해 한국경제를 침몰시키고 있으며, 남북간의 긴장을 넘어 강대국간의 분쟁에 휘말리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 윤석열은 검찰 독재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이유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선언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행위는 헌법상 '영토 보존의 책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평생을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저항과 공동체를 위한 참교육을 실천하다가 퇴직한 교사들이 고뇌의 결단을 했다. 즉 민족 자주의 원칙과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원칙이 뒷받침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분연히 일어섰다. 더 이상 망가진 나라를 후세들에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적절한 퇴직교사의 선언은 어둠 속에 빛나는 선언이다.

社說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오늘 결정 주목

이사회, 신중한 의사 결정을

광주전남연구원의 운영 체제의 향배가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20일 제출한 연구원 분리안건을 검토해 처리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연구원을 분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재분리안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19명으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제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분리의견은 통과된다. 하여 이날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강기정 광주시장의 문제 제기로 인해 연구원 재분리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지난 15일 첫 공식 입장을 내어 "현재 시·도가 연구원 통합 8년만에 재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명분도, 민주적 소통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전남연구원 지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는 도시행정, 전남은 농촌행정 위주로 특

성에 맞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시도 지자체가 분리를 주장하는 이유인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하며 분리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연구원 이사회가 양 시도의 재분리 각본에 맞춰 단순 거수기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분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16일 각각 개최한 '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팽팽히 맞선 모양새였다. 지역의 잠재력을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의 운영 체제를 이처럼 충분한 논의와 객관적인 평가 과정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대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면 더 시간을 갖고 의사 결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전기요금차등제, 공정사회 위한 첫 걸음

관련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수도권과 지방간 전기요금을 차별화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차등요금제) 특별법안이 지난 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차등요금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전력 생산량 가운데 원자력 비중이 높아 켜야 했던 광주·전남지역의 피해를 감안하면 낮은 값이 없지 않다. 전남의 에너지 자립률은 190%가 넘는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월 기준으로 6065GWh를 생산하고 이 가운데 52%인 3164GWh를 사용했다. 특히 전남은 1월 발전량 중 64%인 3888GWh가 원자력에서 생산됐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 가운데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전남은 전력생산에 따른 피해와 함께 송전비용 등 각종 사회적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안아야 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다. 전국적인 현황도 다르지 않다. 석탄발전소가 많은 충남은 지난 1

월 기준 9543GWh를 생산했지만 소비량은 4666GWh에 불과하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경북 또한 전체 전력 생산량이 6124GWh로 전국 3위를 차지한다.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특성상 해당 지역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각종 기피시설로 제대로 된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어렵다. 사용자 부담 원칙을 떠나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전력생산 지역 주민을 감안하면 전력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전기는 온 국민에 필요한 필수재다. 산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오랜 시간 전력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안전위험을 감내한 전남 등 전력생산지역 주민의 고통을 감안해 차등요금제를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 수도권과 산업계의 동의도 필요하다. 차등요금제는 공정사회를 위한 첫 걸음이다. 부담은 지역에 넘기고 과실은 수도권이 행기는 사회는 결코 공정할 수 없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5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국제 미묘(美猫) 대회가 열려 한 심사위원이 대회에 참가한 페르시아고양이와 교감해 보고 있다.

부쿠레슈티=AP/뉴시스

서석대

지난 주 내린 봄비가 잠들어 있던 꽃망울을 깨웠나 보나. 산기슭 진달래와 개나리가 꽃잎을 활짝 열어 제쳤다. 도로변 벚꽃도 이번주 피어날 태세다. 지난 주말 날들이 행렬도 눈에 띄게 늘었다. 광주 인근은 물론 진도 의신면 유명 호텔 가는 길목에도 차량들이 넘쳐났다. 봄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선사한다. 장미, 수선화에도 감탄사를 연발하지만 길가에 피어 있는 이름없는 풀꽃을 보고도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활짝 핀 꽃은 인간에게 따스한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 이상 가지 않는다. 삼라만상 우주의 질서다.

어느 시인은 "아무리 붉고 탐스러운 꽃이라 하여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제 아무리 권력가라도/ 그의 권세는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은 중국 남송시대 양만리가 지은 '납전월계(선달 월계화 앞에서)'에 나오는 말이다.

'한번 성하면 반드시 쇠하고, 권력은 유한하다'는 의미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인생은 무상할 뿐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80년 전두환 정권도 10년도 채우지 못하고 7년만에 추락했다. 87년 6월혁명을 거치며



'권불십년'을 목도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요직은 육사출신으로 채워졌다. 개각 뉴스에는 육사 0기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 위세는 대단했다. 육사출신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었다.

당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대통령 되려면 서울대 가지 말고 육사를 가야한다"며 육사 진학을 독려했 정도였다.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권력도 87년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고교시절 공부 잘하는 것으로 이름을 떨쳤고 입학 후엔 엘리트 군인으로 승승장구 했겠지만 끝내 권력과 함께 시들어갔다. 스스로 겸손해 하지 않았고 세상 이치를 거역한 탓이다. 권력을 잡고 나면 안하무인(眼下無人)이 되나보나.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던가.

지난해 정권이 바뀐 이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요직에 육사 대신 사법연수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유능한 능력을 갖춘 자들이어서 그 자리에 앉을 자격과 역량이 차고 넘칠터다. 하지만 국민을 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긴다면 어김없이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점 인식해야 하다. 지난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간재 전남취재부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www.jnilbo.com m.jnilbo.com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